

격월간
정세와 동향

제5호

[2012_12_07]

모심의 살림의 노 길

이슈 진단

협동조합기본법 시대의 의미와 과제

분야별 동향

농업·먹거리 | 경제·생활 | 사회·환경 | 정치·사회운동

살림의 말

‘벼 생산 관련회의’의 놀라운 의미 :
‘호혜가격’과 거대한 전환의 실마리



모심과 살림연구소

- 목 차 -

이슈 진단

- 협동조합기본법 시대의 의미와 과제 1

분야별 동향

[농업 . 먹거리]

- 다시 확인되는 밥상머리 교육의 의미와 중요성 7
- 먹거리 '꾸러미' 사업의 확산 9
- 생태농업과 농민의 씨앗에 관한 비아캄페시나 제1차 국제회의 개최 11
- 미국산 쌀의 비소 오염과 농산물 수입 문제 15
- GMO 표시제 확대를 둘러싼 갈등과 쟁점 16

[경제 . 생활]

- '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의 출범과 의미 19
- 생협의 공제사업 추진과 관련한 열린 토론회 개최 20
- 맥킨지가 분석한 협동조합 성공의 원천과 성장 요인 21

[사회 . 환경]

- 일본의 경험, "협동조합 간 협동으로 방사성 오염 문제를 극복하자" 24
- 농촌지역 에너지 협동조합에 대한 영국의 경험 27

[정치 . 사회운동]

- 핵없는 사회를 향한 탈핵 운동 동향 30
- 대선의 소용돌이 정치 속에서, 탈핵과 평화 사회를 꿈꾸는 '녹색당' 소식 31

살길의 딸

- '벼 생산 관련회의'의 놀라운 의미 34
- '호혜가격'과 거대한 전환의 실마리

이슈 진단

협동조합기본법 시대의 의미와 과제

- 협동조합기본법의 본격 시행으로 협동조합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이 조성됨

- 작년 12월 29일 여야의원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한 협동조합기본법이 올해 1월 26일 제정, 공포된 이후 의견수렴 과정 등을 통해 12월 1일 발효됨.
-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 이제는 출자금 규모나 업종 및 분야에 대한 제한 없이 5명 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됨. 금융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진 데다, 공정거래나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에도 적용을 받지 않아 경제적 활동의 여지를 넓혀줌.
- 그동안은 관련법에 따른 8개 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산림협동조합, 연연초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만 설립이 가능했으나, 이번 협동조합기본법의 발효로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법인이 등장하게 됨.

- 협동조합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있음

- 경제위기로 인한 충격과 부작용이 세계 곳곳에서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대안적인 경제모델로서 협동조합이 근래에 들어 크게 주목받고 있음.
- 오늘날 협동조합은 시장자본주의나 국가사회주의가 아닌 새로운 경제모델로서 그 가능성을 세계적으로 검증받고 있음. 전 세계에서 협동조합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는 8억 명 정도이며, 약 1조6천억 달러의 매출에 1억 개의 일자리가 협동조합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짐.
- 협동조합은 특히 근래에 들어서 자본주의의 주류 경제체제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가운데 양극화와 실업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그 의미와 가능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음.
- 승자독식의 사회에서 경쟁과 속도에 지친 사람들이 가지는 현재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탐욕의 경제를 공존과 상생의 경제로 바꿔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런 가운데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있어 협동조합에 거는 기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올해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경제적 활력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재확인시켜준 것이 바

로 협동조합"이라고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음.

- 금융위기 사태가 세계경제 전반을 뒤흔들면서 선진국가들조차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당면한 경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압축적 성장이 가져다 준 부작용으로 사회경제적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복지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으나 저성장 기조 속에서 정부는 오히려 공공지출과 사회서비스 예산을 줄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
- 이런 가운데 협동조합을 통한 민간의 새로운 활력을 바탕으로 보다 인간적인 경제활동 모델을 실현하려는 움직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표출되고 있음.

- 다양한 영역에서 협동조합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음

- 최근 들어서 우리사회에서도 기업(경제활동)의 사회적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선한경제', '착한경제', '살림의 경제', '호혜적 경제',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이름의 대안적 경제모델에 대한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 가운데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자리하고 있음.
- 이제 협동조합은 규범과 당위의 차원을 넘어서 현실의 구체적인 필요와 결합된 실천 모델로 검토되고 적용되고 있음. 협동조합은 경제활동을 통해 인간의 필요들을 매우 폭넓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책임 있게 실현시킴으로써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활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 지금 우리사회는 매우 짧은 시간에 협동조합이 사회 보편적인 대안모델로 인식되어 가는 전례 없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음. 협동조합은 이제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구분의 틀을 넘어선 공통의 관심사가 되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언론, 시민사회 민간영역 모두에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
- 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토론회, 해외 연수 등을 진행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올해 7월 달에는 협동조합 관련 단체들이 공동으로 세계협동조합의 날 기념행사를 처음 가진바 있고, 자자체 별로도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한 교육 및 토론회 등 협동조합 관련 행사들을 진행하기도 했음.
- 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영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과 조례 등을 만들고 있으며, 서울시, 수원시, 전라북도 등 지역사회 발전의 정체성을 협동조합에서 찾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음.

- 나아가 지역 차원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영역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져 지역을 기반으로 한 협동사회경제 영역의 생태계를 풍성하게 조성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음.
-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원주, 제주, 홍성, 천안, 광주, 서울 성북구), 사회적경제네트워크(춘천, 전주, 충남, 구리), 협동조합교류회(성남), 협동조합협의회(안산, 서울 성동구), 협동조합연대회의(전북), 협동조합네트워크(수원), 협동조합운동협의회(서울 은평구) 등 지자체별로 이름은 다양하지만 그동안 서로 잘 만나지 못했던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센터 등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었거나 만들어지고 있음.
- 나아가 전국 단위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20개 단체)와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33개 단체)의 통합 단체인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가 지난 11월 21일 창립식을 가지고 출범했음.
- 협동조합에 대한 높은 관심은 올해 들어서 협동조합과 관련한 책이 10여 종 새롭게 출간된 데서도 확인할 수 있음.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출판연월
지역을 살리는 협동조합만들기 7단계	그레그 맥레오드	한살림	2012.10
새로운 대안경제 협동조합 시대	김용한, 하재은	지식공감	2012.9
일러스트로 배우는 생협매장 운영 가이드북	오리토 이사오	그물코	2012.8
협동조합 참 좋다	김현대, 하종란, 차형석	푸른지식	2012.7
협동조합 그 아름다운 구상	에드가 파넬	그물코	2012.7
사람중심 비즈니스 협동조합	존스톤 버첼	한울아카데미	2012.7
협동조합으로 지역개발하라	그레그 맥레오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12.7
깨어나라 협동조합	김기섭	들녘	2012.4
한국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김형미 외	푸른나무	2012.3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스테파노 자마니 외	북돋움	2012.1

- 저성장 시대에 '협동조합 붐(boom)'이 일어나는 의미와 남겨진 과제들

-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산업혁명이 융성하던 시기에 협동조합이 가진 역할 못지않게 오늘날 세계적 경제위기와 함께 장기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협동조합 모델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즉, 돈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협동조합 정신은 경기불황 국면에서 단기적 이익을 쫓아 인력 감축으로 경비를 절감하기보다는 협동의 힘으로 고용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음. 또한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만들고 자원을 순환시켜 지역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유통비용 절감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며, 비분할(非分割) 공동자본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여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과 생존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 우리사회에서 민간영역 못지않게 정부 차원에서 협동조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하는 이유도 협동조합을 통한 고용창출과 복지수요 해결이라는 분명한 기대와 목표가 있기 때문임.
- 정부(기획재정부)는 기본법 제정을 통해 향후 5년간 최소 8천 개에서 최대 1만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 4~5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당장 기본법이 시행된 첫해에 최소 8천에서 1만여 개의 협동조합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또한 기본법을 통해 육아와 노인 돌봄, 의료, 대리운전, 퀵서비스, 경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면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나아가 대형 유통 자본에 의해 골목경제가 위협 받으면서 위기에 내몰린 영세 상인과 자영업자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생존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하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현실에서의 높은 기대와 요구들 못지않게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음. 민간 주체들은 협동조합을 만들면 어떤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나 사업모델은 없는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정부는 “협동조합을 통해 몇 년 후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가시적 목표를 앞서서 제시하고 있는 실정임.
- 이처럼 민간 주체들의 의식과 역량이 채 자리잡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로부터의 지원에 의존하고 정책과 제도에 의지하게 된다면 ‘자율’, ‘자립’, ‘자치’라는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을 상실할 우려가 있음. 게다가 지난 근대화 과정의 낡은 유산인 성과주의, 목표달성주의, 결과중심주의, 속도주의의 함정에 빠져 정부 스스로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게 된다면 모처럼 조성된 협동조합에 대한 기대와 사회적 열망마저 훼손될 수 있음.
- 농협과 신협을 비롯한 우리사회 주류 협동조합이 걸어왔던 시행착오 과정과 자립의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자활과 사회적기업의 경험, 그리고 근래에 경험하는 유사 의료생협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협동조합 봄’의 시대를 맞아 냉정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음.

- 위기 극복을 위한 협동조합의 창조적 역할에 대한 기대와 교육의 중요성

- 사회-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기본법 제정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진 것은 바람직하나, 협동조합의 대안적인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보다는 일자리 제공과 복지서비스 전달과 같은 현상에 대한 처방적인 수단으로 협동조합을 활용하려는 인식과 접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
- 여야의 유력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경제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부당 내부거래와 대주주 가족 지배권 행사 제한 등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독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경제 질서에 변화를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따라서 경제민주화와 협동조합을 연결시켜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고민은 부족한 상태이며, 협동의 가치와 원리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설계하고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준비와 노력도 부족한 것이 현실임.
- 결국, 자본 규모를 바탕으로 한 독점의 폐해를 시정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인 만큼,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넘어서 현실 경제가 가진 구조와 토대, 체질 자체를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 발전시키기 위해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원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을 적극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한편, 협동조합의 힘은 법률과 제도, 조직 체계에 앞서 함께 활동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옴. 즉 '협동하는 사람이 협동하는 조직을 만들고, 협동하는 조직이 협동하는 사회를 만든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살리고 운동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 매우 중요함.
- 교육과 훈련은 협동조합을 유지, 발전시키는 핵심으로, 협동조합 조직체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사상과 가치에 대해 구성원들 간에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함. 조직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가 약하면 협동조합의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는 장점 대신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해서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급속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게 될 수도 있음.
- 협동조합에서 교육과 훈련은 조합원의 참여 욕구와 능력을 진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 상호간 관계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함. 협동에 기반한 조직체로서 협동조합에서 신뢰 관계는 매우 중요한데, 신뢰 관계를 만들어내는 데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점에서 지혜와 능력을 갖춘 자각된 주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 나아가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상호부조의 정신을 협동과 연대를 통해 사회적으로 확장시켜나가는 데도 교육의 역할은 중요함. 교육 기능이 취약한 협동조합 조직의 정체성은 약해지고 경직되고 폐쇄적으로 흐를 수 있음.

- 결국 '공 한 쪽도 나눠먹는 정신'으로 협동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의 구성원들은 물론 역사와 규모, 활동목적과 내용 등이 서로 다른 주체들이 서로 협력해서 공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나갈 필요가 있음.
- 마침 최근 들어서 다양한 영역의 주체들이 서로 연대해서 지역사회 협동조합 생태계를 풍요롭게 만들고자 하는 논의들이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아직은 그 필요성에 비추어 축적된 경험 자체가 매우 부족한 만큼, 인내를 가지고 서로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기 위해서도 소통과 이해를 돕는 교육 과정이 개발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음.

분야별 동향 1

농업·먹거리

● 다시 확인되는 밥상머리 교육의 의미와 중요성

- 가족 간의 단절된 대화를 이어 주는 '밥'

-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대표적인 활동은 '저녁 식사'임.
- 하지만 과반수의 청소년들이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은 하루 중 한 시간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맞벌이 가정이 늘고, TV와 컴퓨터 등의 매체에 빠져드는 시간이 길어져 가정 내에서 대화시간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임.
- 최근 발표된 '밥상머리 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¹⁾,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자 공간이 '밥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번 조사에는 자녀를 둔 가족의 72%가 가족 간 밥상머리 대화가 부족하다고 답함. 식사 중 대화를 거의 하지 않거나(7.5%) 전혀 나누지 않는 경우(1%)도 있었음.
- 특히 온 가족이 모이는 식사 횟수는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줄어들었음. 1주일 평균 가족 식사 횟수가 '1~2회'라고 밝힌 응답자 중 초등생 자녀를 둔 가족은 9.6%였지만 자녀 연령이 중학생(11.3%), 고교생(24.7%)으로 올라갈수록 그 비중은 높아졌음.
- 초등생 자녀를 둔 가족의 경우 아버지가 주로 식사 자리에 빠지는 반면, 고교생 가족의 경우는 자녀 본인이 주로 빠지는 것으로 나타남. 가족이 식사하는 평균 시간도 28분으로 나타남. 20분 미만이라고 답한 사람도 24.4%를 차지하였음.

- '밥상머리 교육'은 단순한 식사예절 교육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긍정적인 삶의 힘을 길러내는 것

- 부모의 경우 식사 횟수와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8.5%로 높게 나타났으나, 자녀는 늘려야 한다는 응답자(39.5%)보다 지금과 비슷하면 된다고 답한 응답자가 50.5%로 더 높았음.
- 한편, 부모 응답자 중 83.8%가 밥상머리 교육에 대한 실천 의사를 보였으며, 실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응답자도 69.4%나 되어, 밥상머리

1) 이 설문조사는 동화약품이 한국 갤럽에 의뢰해 2012년 10월 한 달 동안 대한민국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초, 중, 고 학생 자녀를 둔 부모 800명과 중고등학생 자녀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과 다양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남.

<참고> 밥상머리 교육 실천 지침²⁾

1.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가족 식사'의 날'을 가진다.
 - 이상적인 가족식사 횟수는 주5회 이상이지만 밥상머리교육의 효과를 기대하려면 최소 일주일에 두 번(주중에 1번, 주말에 1번)이상 가족이 함께 식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2.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식사한다.
3. 가족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정리한다.
 - 이 모든 과정을 온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가족 식사이다.
4. TV는 끄고 전화는 나중에 한다.
5.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천천히 먹는다.
 -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 시간에는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눈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6. 하루 일과를 서로 나눈다.
 - 대화의 주제는 너무 어려운 것을 선택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요 대화의 주제로 삼는 것이 좋다.
7. '어떻게 하면 좋을까'식의 열린 질문을 던진다.
 - 자녀들과 보다 많은 대화를 하려면 개방형 질문을 던져서 자녀들로 하여금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8. 부정적인 말은 피하고 공감과 칭찬을 많이 한다.
 - 식사시간에 부모는 아이를 꾸짖을 일이 있어도 잠시 뒤로 미루고 아이의 말을 공감해주고 칭찬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9.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경청한다.
10. 행복하고 즐거운 가족식사가 되도록 노력한다.
 - 밥상머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가족 모두가 함께 행복한 식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대 학부모정책연구센터가 2012년에 마련한 '밥상머리 교육 실천 지침' 내용 중에서.

● 먹거리 '꾸러미' 사업의 확산

- 최근 '꾸러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용자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

-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속에서 전반적인 식료품 지출 규모가 줄고 있지만,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는 여전히 높으며 이것이 꾸러미 사업으로도 연결되고 있음.
- '꾸러미'는 생산자가 친환경농산물과 제철농산물 등을 박스에 담아 매주(또는 격주) 1회 소비자에게 택배로 발송하는 방식임.
- 우리나라에서 꾸러미의 시작은 지난 2009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사업화 한 '우리 텃밭'(현재 '언니네 텃밭')으로, 현재 약 1,200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음.
- 이 외에도 흙살림에서 운영하는 '흙살림 꾸러미', 전북 완주군의 '건강한 밥상' 등 공식 통계는 없지만 약 30여 개 단체가 사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고³⁾,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소규모로 꾸러미사업을 하는 생산자들도 적지 않음. 꾸러미 이용자는 전국적으로 약 5,000가구 미만으로 추정됨.

<국내에 운영 중인 꾸러미 사업 현황>

이름	법인형태	취급품	시작 년도	매장 운영	특징
언니네 텃밭	사회적기업	친환경농산물, 토종농산물	2009	X	토종종자, 식량주권 여성농민
흙살림꾸러미	사회적기업	친환경농산물	2010	O	흙살림 운영
건강한밥상	영농조합법인	제철 농산물	2011	O	로컬푸드
하루네끼	농업회사법인	친환경농산물	2012	X	자연농법, 익일도착 시스템
강동도시농부(주)	농업회사법인	친환경농산물	2011	O	로컬푸드, 서울 근교
지리산꾸러미	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산물	2010	X	지리산 인근 생산, 자연 채취
설레임	소비자생활협동 조합	친환경농산물	2012	O	한살림서울생협운 영

3) 국민일보. 2012. 11. 2일자.

- 꾸러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유통 단계의 축소에 따른 '저렴한 가격'과 밭에서 식탁으로 바로 배송하는 '신선함', '제철 농산물' 또는 '친환경 농산물'과 같은 기능적인 측면 외에, 생산자와 소비자의 '얼굴 있는 관계', '토종종자 보호'와 같은 가치도 강조하고 있음. 대부분 꾸러미는 회원제로 운영하며 격주나 주 단위로 공급하고 있고, '건강한 밥상'이나 '강동도시농부'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며 인근 지역 소비자들과의 접촉을 넓혀가기도 함.
- 꾸러미는 생산자들에게는 생산의 안정적인 지속과 소비자들에 대한 농심(農心)의 전달, 건강한 먹거리를 통한 사회적 기여 등의 장점이 있음. 소비자들도 꾸러미를 통해 자연에도 좋고 몸에도 좋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편리하게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꾸러미는 공동체지원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이하 CSA)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음⁴⁾

- CSA는 일본의 '제휴(提携) 운동, Teikei'에서 시작하여 유럽을 거쳐 미국으로 전파되었고, 한국에서는 한살림을 비롯한 생협들이 '도농직거래운동'의 이름으로 진행해 옴.
- 각지의 사회적 여건과 상황에 따라 CSA 형태와 내용, 의미와 방식은 다르지만 크게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소비자의 생산자 지원과 생산자의 책임 생산', '공동구매 방식' 이라는 세 가지의 운영상 특징을 가지고 있음.
- CSA를 통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는 농업의 기계화, 산업화, 세계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사라져가는 소농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가까운 먹을거리의 소비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회적 거리를 줄이고, 생태계의 환경적 부하를 줄이며, 인근 지역의 농업을 보존함으로써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음.
- 한편, CSA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해진 물품만을 받음으로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점, 소비자가 직접 요리를 해야 하는 부담, 다품종 채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농가의 농업 역량 부족, 기후변화 등 외부 요인에 따른 농산물의 품질 저하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 향상 등의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CSA가 매우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미국에서는 CSB(Bakery, 빵집), CSR(Restaurant, 식당), CSY(Winery, 와인)등으로 다양한 영역의 생산자를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음.
- 한국에서 CSA가 꾸러미 형태로 최근 몇 년간 급속히 인기를 얻는 데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음. 즉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 확산, 농산물 가격 불안정, 새로운 가치 소비의 확산, 전국적인 인터넷 망의 구축과 저렴한 택배 물

4) 정은정 외, "텃밭 공간을 통해 본 여성과 장소의 정치". 농촌사회 제21집 2호(2011).

류 시스템, 그리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친환경농업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사회적 신뢰를 쌓아온 생산자들의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함.

· 한편,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사회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농식품의 온라인 유통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꾸러미 사업이 산발적으로 활성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내년부터 공동체지원농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생산자와 소비자 조직화, 인프라 구축,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주요 방향으로 삼고 각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단순한 유통방식의 차원을 넘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동을 모색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생태농업과 농민의 씨앗에 관한 비아캠페시나 제1차 국제회의 개최

- 생태농업과 농민의 씨앗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첫 번째 국제회의가 지난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태국 수린에서 개최됨.

· 2009년 스페인 말라가에서 있었던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선언” 이후 그동안의 경험들을 공유하고 전략과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로 23개국의 생태농업, 농민 씨앗, 농민학교 등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이 참여하였음.

· 참여자들은 생태농업적 전환 없이는 식량주권은 가능하지 않다고 파악하면서, 생태농업은 소농의 농업이자 자본주의시스템에 대항하는 도구라고 주장하였음.

- 각 대륙별 생태농업 활동 소개

· 남미 지역에서는 농민학교를 통해 농민을 위한 새로운 사회에 대한 건설을 준비하면서 매우 정치적이고 사회운동적인 차원에서 생태농업을 농민들에게 전파하고 있음.

·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생태농업이 초국적 기업들에게 뺏긴 토지를 확보하는 운동으로서 농민의 권리와 결합되어 있다고 봄. 짐바브웨는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농업을 수립하는 과제로서 생태농업을 설정하고 비아 캠페시나와 연계를 맺고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음. 반면 말리의 경우 빌게이츠 재단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강력한 모델로서 화학농업을 지원하면서 생태농업의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쿠바는 자국 경제가 무너져 모든 것을 생산해야 하는 특별한 시기에 “우리가 직접 우리가 먹을 것을 생산해야 한다”는 과제를 가지고 전국소농연합(ANAP) 차원에서 생태농업을 실천해왔음.

- 농민의 씨앗을 지키기 위한 활동 보고

· 2011년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발리 선언문에 대한 검토와 2012년 11월 7일 파

리에서 있었던 종다양성 위원회 보고 후, 소농들의 씨앗 지키기가 왜 중요하며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와 검토가 진행됨.

- 현장에서는 각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연대해서 '씨앗을 빼고 생태농업을 말 할 수 없다', '농민이 씨앗을 가져야 한다'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들이 제안되었음.

- 농민학교에 대한 보고

- 산업농, 화학농이 주류인 현대 자본주의 농업 시스템에서 생태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농민교육을 담당하는 농민학교에 대한 사례도 보고되었음.
- 쿠바 ANAP에서 운영하는 농민학교, 남미의 IAEA, 브라질 MST 농민학교, 인도네시아 농민학교 등 각 국가에서 운영하는 농민학교는 구체적인 방법은 서로 달랐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음.
 - 참가자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선발하며, 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발전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 교육의 목적은 식량주권, 씨앗 지키기, 생태농업 등 농민의 농업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이다.
 - 교육은 반드시 현장, 지역과 결합되어야 한다.
 - 이론과 실체가 조화롭게 되어야 하며 교육 이수자는 반드시 지역에 들어가서 전파해야 한다.
 - 조직 내의 회원뿐 아니라 비조직 회원도 참여하며 대학 및 학자, 다양한 세력들과 연대하는 활동이다.

생태농업과 농민의 종자에 관한 제1차 국제회의 선언문: 수린 선언⁵⁾

2012년 11월 6일-12일 / 태국 수린

비아 캄페시나 9개 지역 회원단체를 대표하여 참석한 국제대표단들이 아시아 태국 수린에 모여 생태농업과 종자에 관한 제1차 국제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회의는 생태농업과 종자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전략과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생태농업과 종자는 식량주권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라는 총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회의 장소로 태국을 선택한 이유는 현재 태국에서 소농들로부터 녹색 혁명식 모델에서 생태농업으로 전환하는 운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대표단들은 "소농의 생존이 전 사회의 생존"이라는 기치로 생태농업 운동을 점차 확산시키고 있는 태국 농민들을 지지한다. 이 회의를 통해서 국제 대표단들은 소농에 의한 생태농업을 강화하고 있는 태국

농민들의 경험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참가자들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생태농업이 식량주권의 초석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농업이 기업이 만드는 투입재에 의존한다면, 식량과 토지의 상품화와 투기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공동체에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지 않으면, 식량주권은 실현될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생태농업, 유기농업, 자연농업, 저투입 지속가능한 농업 등 생태농업적 농업 방식을 지칭하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으나, 비아 캠페시나는 그 이름이나 명칭에 대해 연연하지 않는다. 다만, 비아 캠페시나 운동이 지키고자 하는 생태농업적, 사회적, 정치적인 핵심 원칙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비아 캠페시나가 생각하는 진정한 지속가능한 농민의 농업은 전통적인 소농의 방식을 회복하고 생태농업적 방법들을 새롭게 혁신하며, 영토와 종자를 통제하고 지켜내며, 사회적 평등과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지켜내는 것이다. 또한 녹색혁명식 농업 방식을 이러한 운동으로 전환하는 모든 농민들을 환영하는 바이다.

화학적 투입재에는 자유롭더라도 봉건적 토지 소유 방식은 생태농업이라 할 수 없다. 여성들의 의사결정력이 존재하지 않고 남성에게 의해서만 통제되는 농장이라 여성들의 작업량이 높아지고 있다면, 이것 또한 생태농업적 방식이 아니다. 단작화의 체제를 유지한 채, 대중적으로 "유기적" 상표를 붙이는 방식 (예를 들어 치아파스 유기농산물)과 같은 비싼 화학 투입재를 비싼 유기 투입재로 대체하는 유기농업도 비아 캠페시나는 강하게 거부한다.

지난 4년 동안 비아 캠페시나의 경험과 실천과 평가에 근거했을 때 생태농업이야말로 식량주권과 민중의 주권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전략적 부분임이 분명하다.

생태농업은 인류가 직면한 주요 과제에 전 지구적으로 본질적 해답임을 우리는 이해한다.

먼저, 소농은 다양한 생태농업적인 방식을 통해서 현재와 마찬가지로 인류를 먹여살릴 수 있으며 식량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농기업 체계가 생산성이 더 높다고 널리 알려진 통념과는 달리, 생태적 방식이 단작화보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더 높고 더 건강하고 영양이 더 풍부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과 직접 관계 맺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두 번째, 생태농업은 환경적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양한 생태농업 방식으로 소농의 농업은 토양에 탄소를 보유하고, 소농과 가족농에게는 기후변화 및 증가하는 자연재해에 적응하고 회복할 자원들을 제공한다. 생태농업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 변화의 핵심인 석유 의존적 에너지와 농업의 관계망을 변화시킨다.

세 번째, 생태농업은 공공재와 집단성을 지지한다. 농민과 도시민에게 보다 나은 삶의 조건을 제공할 뿐 아니라 식량주권과 대중 주권의 중심으로써 생태농업은 토지와 물, 종자와 지식이 인류를 위해 쓰이는 민중의 유산으로써 회복되어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생태농업을 통해서 우리는 지배적인 식량생산모델을 변화시키고, 농업의 생태계를 회복하며, 자연과 사회의 신진대사적 기능이 재형성되도록 하며, 자동차가 아니라 인간을 먹이기 위한 농산물을 수확하게 된다. 필리핀의 농민들은 이를 "경제를 위해, 건강을 위해, 자연을 위해"라고 이야기한다.

소농과 가족농인 우리에게 생태농업은 또한 초국적 기업과 지배적인 농수출 모델에 대항할 수 있는 도구이다. 현재의 농업자본과 금융자본으로부터 기술적, 경제적 자립을 하지 않으면 기업들에 의해 구축된 억압적 구조로부터 우리 농민들은 결코 해방될 수 없다. 또한 미국의 경우처럼 농장 노동자들이나 다른 농업 관련 노동자들의 상황에 비추어봐서도 자본에 의해 노예화되어 있는 이러한 노동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생태농업과 식량주권은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생태농업은 자본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평등한 새로운 사회시스템에서 사회정의의 건설하는 핵심이 된다.

생태농업은 민중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개혁 투쟁에 있어서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토지를 되찾기 위해 투쟁해 온 무토지 농민들, 브라질이나 짐바브웨에서 토지개혁을 통해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들은 농업을 지켜내고 지속시키기 위해, 또 자신들의 가족들 뿐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생태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따라서 생태농업을 바탕으로 한 토지개혁은 소농과 가족농들이 전체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다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 아르헨티나에서 "우리가 토지의 일부이자 민중을 먹여살린다"의 구호는 이러한 활동에 확신을 부여한다.

우리의 동료인 인도 농민들에 따르면 1995년 이후 27만 명의 농민들이 자살했는데 그 원인이 기업적 투입재 의존으로 인한 '부채의 덫' 때문이라고 한다. 다행히도 새로운 생태농업 운동 방식이 이러한 어둠으로부터 희망의 빛을 비추어, 농민들이 마을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더 많은 삶을 누리며 지속적으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무예산 자연농업 운동은 인도 농촌지역에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

유럽에서 경제위기와 금융위기는 소농 운동의 제안으로 시장을 재지역화하고 화석 연료에 덜 의존적인 방식으로 식량을 생산하며, 지역 경제에 새로운 역동성을 부여할 뿐 아니라, 특히 동유럽에서는 농촌지역으로 돌아가는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생태농업의 새로운 잠재력이 증명되고 있다. 농업개혁과 생태농업을 통한 식량주권을 위한 시장 규제는 또한 값싼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으로 저가 수입물에 의해 고통 받는 유럽과 미국의 농민들에게 대안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년 동안 녹색혁명의 도입을 추진하는 아그라(아프리카 녹색혁명 연대)의 공격을 받아온 말리의 소농과 가족농은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생태농업적 생산 방식이 어떻게 식량과 수백 만 명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자주적 경영을 통해서 어떤 외부 투입재 없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지, 또 지역의 토양-생물 다양성과

토착 지식을 공유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생태농업은 또한 농촌 청년들이 농촌에 살면서 존엄 있는 삶을 유지하며 식량 생산과 공동체를 위한 식량 공급에 계속해서 종사할 수 있게 하는 대안이 되고 있다. 농촌 청년들이야말로 미래 세대를 먹여 살릴 주체들이다.

지난 20년 동안 비아 캠페시나는 농업개혁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벌여왔으며, 20주년을 맞이하는 이 역사적 시점에서 그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평가하려고 한다. 브라질 무토지 농민들이 "점령하라, 저항하라, 생산하라!"를 외쳤다면, 전 세계 농민들도 토지를 위해 투쟁하고 토지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생태농업이 민중들을 먹여 살릴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지금은 생산의 시대이다!

● 미국산 쌀의 비소 오염과 농산물 수입 문제

- 미국에서 생산되는 쌀에 독성물질 비소가 오염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됨

- . 지난 9월 미국 소비자단체인 컨슈머리포트(Consumer Report)가 뉴욕과 미국 온라인 소매상에서 유통되는 쌀 223개의 샘플 중에서 각종 암을 유발하는 무기비소가 최대 8.7 μg (1회 섭취기준) 검출되었다고 보도함. 비소는 흔히 '비상'으로 알려진 독성 물질로 먹거리, 식수 등을 통한 섭취나 공기에 의한 흡입시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짐.
- .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소 쌀은 남부지역(알칸사스, 루이지애나, 미주리, 텍사스)산으로 밝혀짐. 이 지역은 과거 대규모 면화 재배 과정에서 과도한 농약을 투입해 토양에 축적된 비소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 외에도 거름으로 쓰인 계분에 포함된 록사르손(roxarsone)이라는 비소함유 물질로 인해 토양의 비소 축적량이 높아졌을 것으로 알려짐.

- 한국 정부는 미국산 쌀이 논란이 되자 수입 및 유통을 잠정 중단했지만 곧 해제 조치를 취해 농민단체 등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음

- . 정부는 지난 9월 21일부터 매주 750t씩 수입되어 600개 업체로 공매되던 미국산 쌀의 유통을 잠정 중단했다가 해제함.
- . 시중에 유통 중인 미국산 쌀은 이번에 문제가 된 남부지역의 장립종과 다른 캘리

5) 이 선언문은 모심과살림연구소 박지은 초빙연구원이 번역 하였음.

포니아 지역의 중립종이고, 국내 보유 중인 미국산 쌀 34점에 대한 무기비소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인체에 위해성이 우려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10월 12일부터 중단조치를 해제함.

- . 이번 비소 위해성 평가는 유일하게 비소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중국(0.15mg/Kg)의 기준치 및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무기 비소 기준(0.2mg/Kg)을 참고하였다고 밝힘.
- . 그러나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해제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농민단체들은 '2011년과 2012년 가공용 쌀에 대한 전량 안정성 검증',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가들의 경우를 참고한 비소 함유량 기준 마련', '모든 수입쌀에 대한 유해 물질 기준 마련 및 성분검사 실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량수입정책 재검토', '식량 자급정책을 통한 식량의 안전성과 국민 건강권 확보 방안' 등을 정부에 촉구함.
- . 또한 정부(농림식품수산부)가 이번에 비소 오염으로 문제가 된 곳이 미국 남부지역인 만큼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캘리포니아 산 쌀은 안전한 것처럼 설명하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함. 캘리포니아 지역이 미국에서 세 번째 규모의 목화 산지라는 점과, 2005년 조사에서 총 비소 평균 160ppb가 검출되었다고 지적함.
- . 문제는 지금과 같은 대량의 농산물 수입 체계 하에서는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는 언제든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임. 이번 비소 쌀 사건도 정부가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사회화되었음. 결국 식약청 등을 통해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 검증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내 농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길이라 할 것임.

● GMO 표시제 확대를 둘러싼 갈등과 쟁점⁶⁾

- 안전성 논란 속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

- . 지난 1994년 유전자조작 토마토의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이후 GMO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있어 왔음. 최근에는 프랑스 연구팀의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먹인 쥐 실험 결과가 보고되면서 GMO의 안전성을 둘러싼 과학계의 논란이 커지고 있음.
- . 이런 가운데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재배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음. GMO 보급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미국의 농업생명과학 응용을 위한 국제사

6) 이 글은 지난 2012년 8월 31일 이원욱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된 'GMO 표시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정책 토론회 자료집을 인용 및 요약 정리하였음.

업단(ISAAA)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 전 세계의 GM 작물 재배면적은 1억 2,500만ha로 우리나라 면적(1,000만여ha)보다 12배 이상 많은 규모이고, 이는 GMO가 본격적으로 상업화된 1996년과 비교하면 12년 만에 무려 74배나 증가한 수치임.

- . 국가별로는 우리와 FTA를 체결한 미국이 세계 GMO 생산량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FTA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3%를 차지하고 있음. 중국 경우 현재 생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GM 쌀의 본격 생산을 앞두고 있어서 이의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됨.
- .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농촌진흥청)에서도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등을 통해 17개 작물 133종의 GM 종자 및 작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정부는 병해충 및 재해 저항성과 기능성 등을 가진 GM 종자 및 작물을 개발하여 수출을 통해 고부가 가치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 현재 벼 4, 고추 1, 배추 1종 등 6종은 유전자 검정, 기능검정 등을 거쳐 마지막 안전성 검정 단계에 와 있는데, 문제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은 GMO 종자 및 작물개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알기가 어려워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임.
- . 친환경농업단체에서는 정부가 GM 벼 종자를 수출한다면 이는 곧 상호주의 원리에 따라 GM 쌀 수입의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음.

-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국내 수입 증가와 GMO 표시제를 둘러싼 갈등

- . 세계적으로 GM 농산물 생산량의 증가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GM 농산물이 대량으로 수입되어 왔음.
- . 1995년부터 유전자조작 콩이 암암리에 수입⁷⁾되어 왔으며, 1998년까지 연간 100만 톤 이상의 GM 콩과 옥수수가 일반 농산물과 혼입되어 국내로 반입되어 옴⁸⁾.
- . GMO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2001년부터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를 도입함.
- . 그 결과 유전자 조작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다루는 영업에서는 법적으로 GMO에 대한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⁹⁾, 농산물의 경우 안전성 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으로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7) 한국일보 1999년 2월 11일.

8) 한겨레신문 1998년 8월 24일.

9) 식품위생법 제 12조의 2.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56조.

. 그동안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 중 비의도적 혼입률의 문제와 예외 품목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관한 것은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법을 개정하여 보완하였음. 그러나 2008년의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식품접객업에 대해서는 표시의무가 없다는 점, 그리고 복합원재료에 대한 표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 GMO 표시제 확대를 둘러싼 논란과 쟁점

찬성	반대
. GMO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안전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은 아님. . GMO의 안전성 평가는 다양한 우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제도일 뿐 이를 식품 표시의 예외를 인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서는 안됨. . GMO 검사방법은 표시제 확대의 찬반여부를 떠나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점으로, 결국 기본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만큼 관리가 어려운 농산물과 식품 유통은 국민 생존을 위협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적 제약에 따른 검사방법의 한계를 표시대상 제외 이유로 삼을 수는 없으며 오히려 표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식품물가 상승은 표시제 확대보다는 주로 원재료 값과 환율 상승에 따른 것임.	. GMO 자체가 이미 안전성평가를 거쳐 기존 농산물과 다를 바가 없는 만큼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음. . 가공식품의 경우 기술적으로 GMO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이 충분히 마련되어있지 않음. . 먹거리 상당 부분이 가공식품인 현실에서 GM 표시를 확대하면 생산비용을 상승시켜 국내 식품산업이 위축될 것임. . 가공식품 대부분 수입농산물을 원료하는데 농산물 주 수출국인 미국 등에서 GMO 재배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면 결국 생산원가만 상승시킬 것임. . 과도한 표시로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식품 간 차별이 소비자의 계층 간 차별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들의 식품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포장재 재제작으로 인한 비용 추가와 과중한 처벌 등도 문제임.

. 지난 2011년 7월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미국의 반대로 결정하지 못했던 GMO 표시제도를 허용하기로 결정함. 이제 더 이상 GMO 표시제도는 무역장벽이라는 이유로 GMO 수출국으로부터 WTO에 제소되는 일이 없게 되었음. GMO 표시를 막는 국제적 장벽이 사라진 가운데 우리 스스로의 결단만 남아 있음.

분야별 동향 2

경제·생활

● '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의 출범과 의미

-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조직으로서 '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의 등장

-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20개 단체)와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33개 단체)의 통합 단체인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가 11월 21일 창립 행사를 갖고 공식 출범함.
- 20여 개 단체 70여 명이 참가한 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창립 출범식에는 한국의 협동조합 부분과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해온 단체들이 뜻을 모아 우리나라 협동사회경제 영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짐.
- 창립 출범식에서는 연대와 협동으로 협동사회경제 영역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은 정관을 승인하고, 관련한 활동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대표단을 선출함.
- 대표단은 논골신용협동조합 유영우 이사장, 사회투자지원재단 김홍일 이사장,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김정렬 상임대표,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최갑선 회장, 한살림연합 이상국 대표로 구성되었으며, 상임대표는 한살림연합 이상국 대표, 감사에는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정재돈 이사장이 선임됨.

- 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의 출범으로 협동조합 각 영역은 물론이고 사회적기업, 자활, 마을기업 등 다양한 영역의 협동사회경제 주체들이 긴밀하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됨

- 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에는 11월 말 현재 3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의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비전으로 삼아 사회적경제 조직의 확대와 업종별, 지역별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돈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와 지속적인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계획으로 밝힘.
- 내년 2013년도 주요 사업과제들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운동의 네트워크 및 연대
 - 둘째, 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의 교육기획 및 지원활동
 - 셋째, 관련 정보의 소통과 집중
 - 넷째,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조사 및 통계 연구
 - 다섯째,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연구 및 대변 활동

● 생협의 공제사업 추진과 관련한 열린 토론회 개최

- 생협법에 대한 전면 개정안이 2010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후 생협 활동의 영역을 다면화, 다양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공제사업도 그 중 하나임

. 개정 생협법에서는 그동안 금지해왔던 금융사업 부문에서 공제사업을 단위조합에서는 금지하는 대신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에서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협의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의 적용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생협 차원에서 공제사업과 관련한 검토 및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지난 3월 7일 생협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대표자 간담회에서 생협단체들은 생협 공제의 효용과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 규정 등을 정비하여 연내에 생협 공제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하였음.

. 이후, 공제사업을 시행할 생협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공제규정 마련 등의 작업이 진행되지 못했으며,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사업 등 생협의 건전성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를 용역사업으로 진행하였음.

. 이에 생협전국협의회는 용역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공제사업 추진과 관련한 생협단체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 11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와 연구용역수행자, 생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생협 공제사업 열린 토론회”를 한살림연합 회의실에서 가짐.

-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생협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의견 교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구 보고서 내용에는 공제사업 인가 기준으로 최소 출자금 규모를 연합회는 10억, 전국연합회는 25억 원으로 하며,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공제계리인 등 전문인력을 두거나 외부 조직에 공제사업을 위탁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 또한, 상품판매(모집), 상품개발, 자산운용, 계산회계,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감독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생협단체들은 용역 보고서상 인가기준 및 감독규정(안)은 일본이나 국내 다른 공제사업(수협, 신협 등) 규정을 참고한 것인데, 이것을 공제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은 국내 생협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함.

. 생협단체들은 인가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생협단체 개별 연합회들이 공제사업에 대해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인가기준 등이 제정되

더라도 곧바로 공제사업을 시작하기는 여건상 어렵다는 의견을 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공제사업 관련 규정의 제정은 생협단체와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힘.

- 한편, 생협단체들은 공제사업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만큼 개별 연합회보다 전국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조속한 전국연합회 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음. 또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생협단체들 간에도 공제사업에 대한 입장과 이해정도, 전망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학습과 단체 간 토론 등을 통해 소통과 의견 교환의 폭을 넓혀 나가기로 함.

● 맥킨지가 분석한 협동조합 성공의 원천과 성장 요인¹⁰⁾

- 협동조합 성공의 원천

- 전 세계 GDP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조합원 소유구조와 민주적 협치(governance)의 독특한 모델을 통해 장기간의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주식회사와 구별되는 사업체로서 주목을 받고 있음.
- 이 보고서는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47개의 협동조합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동일한 산업(보험, 금융, 소매, 먹거리와 농업)과 지역(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이머징마켓)의 54개 주식회사와 비교한 결과를 요약한 것임.
-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보다 성장이 느린 조직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협동조합과 주식회사가 전반적인 성장률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이 둘 간의 차이는 성장 그 자체가 아니라 성장을 구성하는 동력¹¹⁾에 있음이 밝혀짐. 즉,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에 비해 시장점유율개선(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임)에서 더 뛰어난 성과를 낸 반면, 포트폴리오 모멘텀(기업이 자산의 분산투자로 경제적 성장을 달성하는, 기업 내부 역량을 키우는 유기적 성장)에 의한 성과는 주식회사에 못 미쳤음. 인수 합병 분야에서는 두 조직 모두 거의 비슷한 성과를 나타냄.
- 협동조합이 시장점유율 개선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이유는, 협동조합이 전통적으로 조합원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진행해 왔고, 사업 분야에 대한 지식

10) 올해 유엔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협동조합에 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McKinsey)가 협동조합을 주제로 다룬 보고서("McKinsey on COOPERATIVES", 2012, Autumn)의 첫 장을 모심과살림연구소 하만조 연구원이 번역 정리함.

11) 맥킨지는 기업 분석을 위해 성장 동력을 '시장점유율개선(market share gain)', '포트폴리오 모멘텀(portfolio momentum)', '인수 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의 세 가지로 구분함.

과 접근성이 뛰어나며, 보편적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확고한 사회적 가치로 지지하기 때문임.

· 한편 맥킨지는 포트폴리오 모멘텀이 주식회사의 성장에 55% 정도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인 데 반해, 협동조합은 현재 조합원의 당장의 이익에 복무하지 못하는 새로운 시장요소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처럼 신속하게 자본을 재배치하기 어려워 이 분야에서 성과가 저조함. 그 이유를 다음 두 가지로 진단할 수 있음.

- 첫째, 협동조합이 혁신적인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탐색하기 보다는 조합원의 현재 필요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둘째, 협동조합이 경영적 의사결정에서 협의를 선호하는 지배구조를 갖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

- 협동조합의 성장 요인

· 협동조합의 성장 요인의 하나는 협동조합 특유의 '조합원 및 고객경험(customer experience)¹²⁾'을 통해 협동조합 본래의 장점인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이는 것임. 즉 협동조합은 조합원 소유 모델의 특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이에 근거해 협동조합은 전형적으로 다음 세 가지 성장 유형을 보임.

- 첫째, 조직의 단기적 금융 이익에 앞서 조합원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조합원의 충성심을 얻을 수 있고, 조합원에 기반하여 성장할 수 있음.
- 둘째, 조합원과의 접촉을 강화함으로써 조합원의 기대와 필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음.
- 셋째, 협동조합이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 때 더 많은 조합원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조합을 성장시킴.

· 다만 협동조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일로 현상(Organizational silos effect, 조직 내의 부서들이 내부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영국의 협동조합 그룹은 식품소매, 금융, 보험, 장례, 제약, 여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개별 사업이 아니라 그룹 전체 차원으로 브랜드화 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조합원들이 다른 상품과 서비스를 알고 이용하도록 하여 큰 성공을 거둔바 있음.

· 협동조합의 또 다른 성장 요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접한 사업 영역에서 기회를 얻는 것으로, 대부분의 협동조합들은 이 부분에서 주식회사에 비해 뒤처져 있음. 새로운 상품과 새로운 시장은 현재 조합원에게 있어서는 차선으로 보여 지

12) 고객경험관리(CEM: Customer Experience Management)는 제품이나 회사에 대한 고객의 전반적인 경험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세스로, 기업은 모든 접점에서 고객과 관계를 맺고, 각기 다른 고객 경험 요소를 서로 통합해 줌.

지만, 이 영역을 향상시키는 것은 협동조합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자 기회임.

- . 협동조합이 기회를 잘 살려내기 위해서는 우선 조합원의 채워지지 않은 요구를 체계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음. 많은 협동조합들은 마케팅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고도로 분권화된 조직 구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음. 그러나 프랑스 상인 조합의 E.Leclerc는 점주들이 사업가적 본성을 강화해서 고객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격을 낮추거나 유통을 개선시키는)를 찾도록 격려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고객을 위한 가치를 창조하도록 지원하였음. 이러한 모델은 1970년대 중반 세계적인 석유 위기 때 휘발유 유통 시장에서 규모의 이익을 취해 고객에게 도움을 준 바 있으며, 1980년대에는 보석 소매사업에서 중간계급 고객을 위한 저렴한 상품을 출시해 성공하였는데, 이것은 협동조합이 경쟁자들보다 낮은 마진으로 운영이 가능했기 때문임.
- . 새로운 시장의 확대를 위해 협동조합 고유의 능력을 강화하기도 하는데, 네덜란드의 라보뱅크는 1990년대 경쟁에서 실패한 이후 본래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 농업분야에서 지구적 금융 리더로 발돋움 한 사례를 보여주었으며, 프랑스의 Credit Mutuel은 광범위한 소매 네트워크와 선진적인 IT 역량을 강화해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시장에서 가상 네트워크 운영자로서 성공한 사례를 보여줌.
- . 인접 시장이나 국제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상의 도움을 얻기 위한 공식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함. 네덜란드의 축산 협동조합은 자본경영 전략으로 장기간 성장의 동력을 얻었음. 그들은 이익의 40%를 유보이익으로 보유하고 30%는 쿠폰 형태의 비양도성 조합원 채권으로 유지함. 이는 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한 자본의 주요 원천을 제공함.
- . 결론적으로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다른 소유구조, 협치 메커니즘, 이익 시스템을 갖고 있음. 그러나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성장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음. 이번 조사에 참여한 48개 협동조합 리더의 95%는 성장이 최우선의 목적이라고 응답함. 점점 더 자유화된 시장에서 성장하지 않는 협동조합은 스스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규모의 경제를 잃게 될 것임.
반면 협동조합이 더 나은 서비스로 조합원의 이익에 복무하고, 조합원의 요구에 부응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협동조합은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 될 것임.

분야별 동향 3

사회 · 환경

● 일본의 경험, “협동조합 간 협동으로 방사성 오염 문제를 극복하자”¹³⁾

- 동경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쿠시마 현에서는 쌀이 규제치를 넘는다는 문제로 인해 경작제한 지역이 확대되고 있음

. ‘소문’에 의한 피해도 계속되고 있어, 농업현장에서는 영농의욕이 감퇴하여 이농이 촉진되고 있음.

. 원자력 재해 이전(2010년) 후쿠시마 현의 농업조생산액은 약 2,500억 엔, 판매농가는 약 8만 호였음. 하지만 사고 후 수치는 아직 확실치 않으나 농업 관련 손해 배상액이 625억 엔(JA후쿠시마중앙회, 2012년 5월 현재)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연간으로는 1천억 엔 정도의 손실이 추계됨.

. 더 큰 문제는 방사능 오염에 의해 농산물이 팔리지 않는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동안 일본 농업을 유지, 지탱시켜 온 생활기반과 다양한 관계들(자원, 조직, 인간)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것임.

. 이런 상황에서 지역 농업을 어떻게 재생시킬 것일지가 큰 과제로 남아 있음.

. 여기에서 올해 4월 1일부터 잠정규제치였던 방사성 세슘의 기준을 500에서 100Bq/kg로 낮추었으나 새로운 기준에 대한 대응을 현지에서 잘 못하고 있음.

. 이번 원전 사고로 피해 지역들은 복구·부흥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음. 후쿠시마 현에서는 체계적인 피해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이른바 ‘소문’ 피해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 없음.

. 사고 후 11개월이 지나 부흥청이 설치되었으나 그 규모가 미약하고 동일본대지진이라는 틀 안에서 원자력 재해 문제를 처리하는 한계가 있음.

-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한 방사성 물질 분포 지도의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재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 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침이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유효한 자료나 데이터를 제공받지 못한 가운데 부흥계획을 진행하고 있음. 국가 차원의 초기 대응 소홀로 이후 피해를 확대시켰던 미나마타 병의 경험이 재현되고 있음.

13) 이 글은 일본 생활클럽생협에서 설립한 ‘시민섹터정책기구’에서 발간하는 매체인 <사회운동>의 390호(2012. 9. 15 발간, 3~8쪽)에 코야마 료타(후쿠시마 대학)씨가 실은 것으로, 한살림연합 기획부 권을 실무자가 번역한 내용을 요약 정리함.

- . 상세한 방사능오염 분포 지도 없이 효과적인 제염(오염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오염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음식의 안전 검사 체제를 구축할 수 없으며, 체계적인 건강조사 없이 생활 설계가 가능하지 않고, 주민의 안심 없이 부흥 계획을 실천할 수는 없음.
- . 후쿠시마 현에서는 2011년 10월에 쌀의 안전선언을 발표한 후 잠정규제치 500Bq/kg을 넘는 쌀 검출이 계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냈음. 그 결과 기준치 이하의 쌀 출하도 완전히 정체되어 버렸음. 정부의 후쿠시마 현 쌀에 대한 긴급조사에서 500Bq/kg을 넘는 것은 전체의 0.3%, 새로운 기준치인 100Bq/kg을 넘는 것은 전체의 2.3% 수준이었으나 모든 후쿠시마 현의 쌀 유통이 정지되어 버렸음.
- . 방사성 물질의 확산, 오염 상황은 크게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됨. 그리고 농지 곳곳마다 방사성 물질의 오염도도 다르게 나타남. 이런 상황에서 무작위 추출을 통한 샘플 조사는 한계가 있음.
- . 샘플링 검사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농지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정규분포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그러나 실제 오염상황은 평균적이지 않고 분산되어 나타남. 즉 실제 분포 지도를 보면 오염 상황이 모자이크 상태로 타나남.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현행 검사 체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 문제는 검사 기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전수조사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임. 결국 방사능 오염과 관련한 상세한 분포 지도를 작성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구획별로 샘플을 선정해서 검사의 정밀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방사능오염 문제의 종합적 해결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새로운 비즈니스 사업이 등장하고 있음.

- . 현재 후쿠시마 현 내에는 다양한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방사능오염과 관련한 조사 연구와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로 제염기술과 관련된 것이 많음.
- . 문제는 개발된 제염기술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선정이 되면 이것이 커다란 비즈니스 사업을 형성한다는 것임. 2012년의 방사능 오염에 관한 국가 예산은 약 4,536억 엔으로, 내각부 계상 부분까지 포함하면 2011~13년의 3개년에 1조 1,482억 엔 규모에 이름.
- . 제염기술 자체 말고도 큰 문제는 방사성 물질이 지자체를 넘어 확산되고 있는데 각 기관과 지역이 따로 기술개발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제염계획도 각 지자체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임.
- .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각 대학, 기관 및 기업이 각각 경쟁하면서 기술개발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벗어던지고, 재해 부흥을 위해 다양한 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종합적인 연구와 정보센터 기능을 설치하는 것임.

- 방사능오염의 당사자 지역인 후쿠시마 현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 . 후쿠시마에서는 관광객 유치,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촉진, 후쿠시마 응원 이벤트 등 '안전성'을 앞에 내세워 복구 및 부흥을 향한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즉 '후쿠시마에 와 주세요, 후쿠시마의 음식을 먹어주세요'는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 정도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음.
- . 문제는 이런 노력이 '원자력 재해의 손해는 그렇게 크지 않다'로 이어지고, 피해를 과소평가하는 방향으로 향한다는 것임.
- . 이런 상황에서 정부나 동경전력에 피해를 요구하고 적극적인 제염 노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어색해질 수밖에 없음.
- . 그렇다고 현지를 탓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임. 신속하게 재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원래대로의 생활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나무랄 수도 없음.
- . 문제는 조기 복구를 바라는 목소리가 피해를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가해자 측의 이익과 일치되어 버리는 것임. 현상분석과 실태파악 없이 안전성을 내세우면 진정한 피해 현황을 알 수 없음.

- 방사능오염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 및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 현재 세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보공개(2km 메쉬의 분포 지도 등)가 되었으나 플루토늄, 스트론튬에 대해서는 가시화된 오염 확산 상황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체계적인 검사 및 모니터링 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음.
- . 이런 상태에서 국가는 실태파악 단계를 건너뛰고 느닷없이 100mSv/1년 이하는 안전하다든지 20mSv/1년 이하까지는 허용한다는 등의 내용을 밀어붙이고 있음.
- . 안전선언을 내고 싶다는 마음과 실제 오염상황을 알 수 없다는 불안감, 이것이 현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모순이라 할 수 있음.

-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협동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이 필요

- . 방사능 오염문제를 생산자 대 소비자 문제로 왜소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됨.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는 기준치 문제와 구멍투성이인 샘플 조사에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도 불안을 느끼고 있음.
- . '소문' 문제의 원인은 안전검사 신뢰성의 결여(샘플의 정확도), 안전기준 근거의 불명확성에 있음. 그 근원적인 문제는 방사능의 농지분포 지도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샘플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임.

- 4단계 안전검사와 생산·유통 모델을 협동조합 간 협동사업으로서 설계하고 긴급시의 리스크에 대응한 지역 내 푸드 시스템과 지역 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 긴급한 부흥 과제로서 '소문' 피해 대책(①전농지 분포지도, ②농지 및 품목 이행률, ③출하 전 본 검사, ④소비자 검사의 '4단계 검사 체제'와 그 보급)과 중장기적 부흥 과제로서 손해 구조(①플로: 지역내생산물, ②스톡: 지역내총자본, ③사회관계자본)를 해명하고 다른 지역에서의 보급 모델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 중요한 것은 후쿠시마 현 내에 17개 있는 JA 및 전농 후쿠시마를 횡단하는 협동조합 간 협동모델 내에 4단계 안전검사 체제를 도입한 생소(생산자-소비자)제휴모델을 구축하는 것임.
- 특히 안전검사에 소비자 자신이 관여되는 체제를 만드는 것과 인증제도의 구축은 필수 과제라 할 수 있음.

- 지역 독자적으로는 생산 및 유통 면에서는 세 가지 대책이 필요

- 생산(산지) 대책으로서는 농지 마다 방사성 물질 분포 지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고, 그 위에 작부(출하) 가능 산지를 특정하고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유통대책은 중점 과제로, 먼저 규제치(세슘 100Bq/kg)를 준수하기 위한 검사 체제, 검사 결과가 '보이는 유통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됨. 문제는 가령 산지 단계에서의 검사 체제를 정밀하게 해도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임.
- 이러한 대책을 바탕으로 소비자 대책으로서 정확한 정보 제공, 조합원 교육 실시를 협동하여 실행하는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음. 정확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소비자를 포함하여 함께 정보를 제공할 방법을 생각해야 함.
- 그리하여 현재, 후쿠시마 현 내의 농협, 어협, 산림조합, 생협이 만드는 지산지소운동 촉진, 후쿠시마협동조합협의회(지산지소 후쿠시마넷)와 후쿠시마 대학 협동조합 네트워크 연구소가 합동으로 방사능 오염 대책과 후쿠시마 현 농산물 생산유통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이후 대책을 검토해야 함. 방사능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한 생소제휴 및 협동조합 간 협동의 실천이 요구되고 있음.

● 농촌지역 에너지 협동조합에 대한 영국의 경험

- 최근 영국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정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응하여, 농촌 지역 공동체들 스스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움직임들이 커져가고 있음.

- . 영국 협동조합 영역에서 에너지 협동조합은 지난 4년간 24%의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 최초의 협동조합형 풍력단지는 1997년에 영국 북부의 컴브리아 주(州)에서 시작됨. 그 이후 7천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1천 6백만 파운드를 공동체 소유 풍력발전 터빈과 재생에너지 기술에 투자해 왔으며, 그 결과 영국 전역에서 40개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 현재 진행형인 대표적인 협동조합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셰필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Sheffield Renewables co-op)은 사우스 요크셔 지방의 돈(Don)강에 수력발전소를 세우는데 필요한 기금을 모으고 있음. 이는 영국의 공동체 소유 수력발전소 중 가장 큰 규모로, 연간 170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는 수준임.
- . 셰필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금융 투자 이상의 이익을 가져다 줌. 즉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에너지를 만드는데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여기에 한 번 참여한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어서 탄소 발자국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기 때문임.
- . 협동조합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윤리적 인식을 가진 사람들임. 마이크로지니어스(microgenius)라는 이름의 회사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사업설명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단순명쾌하게 정리해서 웹사이트를 통해 프로젝트와 투자자를 연결시켜주는 일을 돕고 있음. 이들은 비영리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 에너지 협동조합을 위한 금융 지원사업을 벌이는 곳도 있음. 영국의 협동조합 그룹(Co-operative Group)은 협동조합 사업부서를 통해 새로운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는데 100만 파운드를 배정하며, 신생 협동조합이나 기존의 협동조합을 위한 무료 지원 사업도 제공하고 있음. 이 외에도 Solar Club과 Energy 21 등의 NGO도 공동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
- . 영국 정부¹⁴⁾도 1990년대 말부터 공동체 단위 재생에너지 발전 정책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2000년 영국 통상부(DTI)에서는 “공동체의 지역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공동체에 투자 이윤이 돌아가도록 하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참여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공동체 단위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 정책을 시사함. 이후 2002년에는 지역국(Country Agency)에서 “공동체 재생에너지 주도부서(Community Renewable Initiative)”를 설립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고자 하는 지역 단체 혹은 개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14) 박진희. “에너지 자립과 농촌에서의 에너지 전환” 농정연구센터 월례세미나 233회 자료집 참조.

- 협동조합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운영할 때 얻는 이점

- . 우선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사업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사업 이익이 대규모의 사기업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조합원들 안에서 전적으로 공유되며, 그 결과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됨. 영국의 한 지역신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70%가 넘는 응답자들이 협동조합적 에너지생산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 . 협동조합적 재생에너지 생산은 국가 차원의 에너지 생산량에 비해 매우 작은 수준이지만 '지역사회 중심', '투자자 중심', '친환경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발전 전망이 매우 높음.
- . 최근 영국에서는 동절기를 앞두고 6개의 대형 에너지 회사가 휘발유 가격과 전기 요금을 6-11% 인상한데 반해, 영국 에너지 협동조합(Co-operative Energy)은 전기 요금을 2% 인하 한다고 밝혀 소비자단체로부터 환영을 받은 바 있음. 비록 작은 에너지 회사지만 이 같은 조치는 시장에서 협동조합이 가진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음.

- 에너지 협동조합으로 탈핵사회에 대한 전망을 열어갈 필요가 있음

- .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빈국이면서 동시에 에너지 다소비국임.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 절약 노력, 지역 분산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 등 에너지 자립을 위한 과제가 많음.
- . 이런 가운데 한살림은 2008년 괴산과 홍천에 조합원들의 힘을 모아 작은 규모의 햇빛발전소를 설립한 바 있으며, 올해 11월부터는 기후변화 대응과 탈핵운동의 차원에서 '햇빛발전협동조합' 설립 운동을 펼치고 있음.
- . 올해 12월말까지 협동조합 방식으로 9억 원의 출자금을 모아서 2013년 4월 완공 예정인 경기도 안성 한살림 새물류센터 지붕(약 2,314m²)에 햇빛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완공되면 매년 약 35만kw의 전기를 생산해서 매일 CO2 518톤 감축과 18만 6천 624그루의 소나무를 식재하는 효과를 거둘 예정임.

분야별 동향 4

정치·사회운동

● 핵없는 사회를 향한 탈핵 운동 동향

- 끊이지 않는 원전사고와 이에 대응하는 현장의 탈핵 운동

- 지난 3월 정부가 실시한 국내 핵발전소 비상발전기 조사에서 영광 2호기 가동 실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데 이어, 5,6호기의 경우 품질보증서 위조 부품이 공급된 사실이 드러나 가동이 중단되었음. 11월 3일에는 3호기의 제어봉에 균열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장 등으로 인해 총 25차례 가동이 중단되었던 영광원전은 올해에만 3월, 7월, 10월, 11월에 걸쳐 총 여섯 차례 가동이 중단되었으며, 그 원인 또한 스위치 오동작, 자동전압조정기 고장, 이물질 유입, 통신카드 고장, 변압기 내 유증가스 농도 증가, 위조부품 사용 등 여러 유형으로 나타남. 이처럼 잦은 고장과 사건 사고로 인해 안전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해당 지역에서는 연대단체들이 속속 출범하였고, 성명서 발표와 규탄 집회, 토론회 등을 통해 원전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음.
- 10월 9일에는 '핵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준)'이 출범했으며, 10월 25일에는 영광 5호기 사고 규탄 집회, 11월 15일에는 영광대책위와 영광 주민들이 함께 '영광원자력발전소 가동 중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범군민 결의대회'를 진행했음. 무안군, 고창군 의회 의원들 또한 '영광 원전 가동 중지 및 안전 대책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였음.

-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탈핵 움직임

- 지난 11월, 순천시가 지자체로는 46번째로 탈핵도시를 선언함. 순천시는 선언문에서 '생태도시 완성을 위해 탈핵·신재생에너지 보급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할 것과, '가정·사무실·상업·산업 등 각 분야에 불필요한 에너지 수요를 절감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적극 실천'할 것을 밝혔음.
- 한편 지난 2월 45개 지자체들이 발표한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도시 선언'은 5가지 공동 실천 계획으로 '에너지 조례 제정', '에너지수요 절감 계획 수립 및 실천', '시민주도형 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보급', '노후원전 가동 중단과 추가 건립 반대', '국가 차원의 에너지정책을 지역에너지정책으로 전환' 등을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내용이 말뿐인 구호로 그치지 않고 각 지자체에

서 실현가능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요구와 모니터링이 필요함.

- 한편, 반핵부산시민대책위는 11월 29일 새누리당 부산시당사 앞에서 고리1호기 폐쇄와 신규원전 추가 건설 백지화 관련 대선공약 채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음.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의 경우 아직 착공되지 않았거나 계획 단계인 신고리 5,6,7,8호 및 신울진 3,4호기 건설 중단,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중단, 안전한 폐기 방안 마련, 에너지 절약형 사회시스템 구축 등 탈핵 공약을 제시하기도 하였음.
- 각종 부실과 사고로 불안감에 떨고 있는 원전 주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대선 정국에서 묻혀버리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탈핵 사회로의 열망과 비전을 지역에서부터 모아나갈 필요가 있음.

● 대선의 소용돌이 정치 속에서, 탈핵과 평화 사회를 꿈꾸는 '녹색당' 소식

- 한 해 두 번의 창당 과정을 거친 녹색당의 현 주소

- '탈핵'과 '농업·식량'을 핵심 과제로 들고 나온 녹색당은 지난 3월 4일 창당을 통해 4.11 총선에서 지역구 2명, 비례 3명 등 모두 5명의 후보를 내고 선거 과정에 참여했음.
- 하지만 후보 2명은 각각 득표율 3, 4위에 그쳐 낙선했고, 정당 득표율도 0.43%에 그쳐 개표 직후 정당등록 자체가 취소된 바 있음.
- 이후 녹색당은 중앙당과 시도당 조직과 당원을 유지한 채 '녹색당+(녹색당더하기, 가칭)'라는 이름으로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하고, 재창당에 나섰으며, 10월 13일 두 번째로 그리고 정당 사상 최초로 수도권이 아닌 농촌 지역에서 창당대회를 개최함.

- 녹색당이 재창당 과정을 거친 데는 현행 정당법이 가진 제약 때문으로,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음

- 현행 정당법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2% 미만일 때는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취소된 정당이 사용했던 당명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군사정권(전두환의 국보위) 시절에 만들어진 이 법은 소수 정당의 정치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어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녹색당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신청한 상태이고, 등록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행정소송을 걸기도 하였음.

- 이 과정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월 26일 2% 미만일 때 정당 등록을 취소시키는 현행 정당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위헌제청을 신청한 상태임.
- 현재는 당명을 되찾는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당분간 재창당 과정에서 '녹색당더하기'를 당명으로 선관위에 등록하였음.

- 녹색당 차원에서 핵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다양하게 펼쳐오고 있음

- 수명이 만료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폐쇄의 필요성을 사회에 알리는 노력과 함께 영덕, 삼척과 같은 신규 원전부지와 밀양, 청도에서의 송전탑 공사 등을 막는 데도 주민들과 함께 하는 연대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한편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재창당 과정에서 두 명의 공동정책위원장을 당원 직접투표로 선출한 바 있으며, 이후 정책위원회와 정책연구소를 만들어 녹색당의 정체성을 담은 정책들을 생산해 낼 계획임.
- 또한, 지역과 영역별로 녹색당 활동들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기초 지역별 모임, 텃밭모임, 기타배우기 모임, 독서모임, 산행모임 등 관심 사항별로 당원모임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의제모임'은 기성 정당과 차별성을 가지는 것으로, 3개 시도 이상에서 30명 이상의 당원이 참여하면 공식적인 의제별 모임이 등록됨. 현재 생명권, 채식, 노동, 정치개혁, 성평등, 탈핵, 평화 등 녹색당의 가치가 잘 드러나는 의제별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독자적인 활동을 진행하면서 정책위원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나갈 계획임.

"언젠가 가까운 시기에 핵발전 대신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유지되는 사회가 실현될 것입니다. 농촌에 사람이 모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되고,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지 않고, 소수자들이 동등한 시민권을 획득하고, 피곤한 노동시간으로부터 탈피된 사회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꿈은 꿈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녹색당의 활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녹색당 김현 사무처장)

- 후쿠시마 사태를 경험한 일본에서도 녹색당이 새롭게 등장함

- 녹색의 미래(みどりの未来)를 위해 세계 각지의 녹색당을 모델로 일본 녹색당(緑の党, Greens Japan)이 2012년 7월에 결성됨.
- 일본 녹색당은 세계 녹색당(Global Greens) 헌장 6번째 목표이기도 한 "생태적 지혜, 참여민주주의(풀뿌리 민주주의), 비폭력, 지속가능성, 다양성의 존중" 등을 중심 가치로 삼아, 이에 찬동하는 일반시민과 지방의원,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지방자치와 국가 정책에서 녹색 정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 녹색당은 탈원전을 목표로 하는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녹색정치

이념을 공유하는 '녹색 니이가타'(緑・にいがた) 등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정치단체(로컬 파티)와도 연계해 활동하고 있음. 이들 지역 정치단체는 당의 규약에 따라 일본녹색당의 지역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기성정당과는 달리 중앙과 지역이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 또한 "생태로 아시아에서 평화로운 사회를 향해"를 당의 슬로건으로 정한 일본 녹색당은 공동대표제와 임원의 반수 이상을 여성으로 하는 쿼터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12월에 예정된 동경도지사 보궐선거에서는 독자후보를 내세우기보다 탈원전 시민후보로 공동 추대된 전 일본변호사협회 회장인 우츠노미야 켄지씨를 지지하고 있음.

살림의말

'벼 생산 관련회의'의 놀라운 의미

- '호혜가격'과 거대한 전환의 실마리 -

"믿기 어려운 광경, 한살림 벼 수매가 결정회의"

"지난 6일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한살림사업연합의 물류단지에서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다. 쌀값을 두고 농민과 소비자가 서로 다투고 있었다. 일반 시장에서는 소비자는 한 톨이라도 더 깎아 싸게 살려고 하고, 생산자는 더 높은 가격으로 많은 이윤을 남기려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 농사꾼들은 값을 내려 받으려고 하고, 소비자들은 값을 높여서 사려고 한다. 겨울 초입에 벌어진 한살림 벼 수매가 결정 회의장 풍경이다."

2010년 12월 24일자 한겨레신문에 소개된 기사입니다만, 20여 년 전인 1991년 한살림공동체소비자협동조합 시절에도 비슷한 광경이 있었습니다. 그해 쌀값을 결정하기 위해 모인 한살림 가족들이 토론을 합니다. 생산자는 "모든 물가가 오르니 우리라도 잡아두자"고 말하는데, 소비자는 "그래도 10% 정도는 인상되어야 생산자도 생활을 할 것 아니냐"고 설득합니다. 결국 그해엔 소비자가 이겨서(?) 10% 정도 쌀값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사회에서나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 벌써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정부나 유통기업이 가격 결정을 좌우한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논리는 먼 나라 일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긴장과 갈등 대신에 격려와 감사가 오고가는 상식 밖의 일이 한살림에서는 연례행사가 되었습니다.

'벼 생산 관련회의' 이야기입니다. 한살림의 농민 생산자들과 소비자 대표들이 1년에 한 번 그해의 쌀(벼) 소비 상황을 돌아보고 이듬해의 쌀 생산계획과 가격을 협의하는 '벼 생산 관련회의' 말입니다.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한살림의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20여 년 전 얼굴을 처음 마주한 생산자와 소비자 대표들은 난감했습니다. 겨우 가격을 정하긴 했지만 생산자도 소비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미안함 때문이

었습니다. 당시에는 가격이 결정돼도 쌀값을 한꺼번에 지급할 능력이 없었기에 농민들이 저장도 떠맡아야 했고 당연히 목돈을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부터는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벼를 미국처리장에 일괄 구매하고 생산농가에게는 일시에 쌀값을 지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단순히 '구매 가격'을 넘어서 책임생산과 책임소비를 포괄적으로 협의하자는 뜻에서 '벼 생산 관련회의'로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경기도 광주물류센터에서 <2012년산 벼 생산 관련회의>를 열었고 4년 간 동결되었던 쌀 가격을 3.6% 인상하고 생산량도 9.2% 늘렸습니다.

물론 올해도 생산-소비 회의는 계속됩니다. <2013년산 벼 생산 관련회의>는 12월 12일(수) 서울 남산유스호스텔에서 열립니다.

생산-소비 약정의 사회경제적 의미

한살림 쌀은 특별합니다. 가격이나 칼로리로 계산할 수 없는 생명세계가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마음이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사회경제적 대안'이 숨겨져 있다는 점에서 한살림의 '벼/쌀'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생산-소비 계획을 세우고 서로의 형편을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풍경 그 이상입니다. <한살림 쌀의 차별성>이란 홍보물을 보면 한살림 쌀의 7가지 차별성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 2번째가 '가격결정'입니다.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가격결정: 일반적인 생산자와 중간 상인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생산자 대표들과 소비자 대표들이 직접 만나 회의를 거쳐 구매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산-소비의 단계를 줄여 가격을 낮추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얼굴을 맞대고 마음을 나눕니다. 서로의 속사정과 형편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한 살림”임을 재확인합니다. 이것이 한살림 쌀의 가격결정에 담긴 '차별성'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시장가격(market price)'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그때그때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때문에 시장가격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또한 소비자와 생산자는 경쟁관계가 됩니다. 한쪽

이 이익을 보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브로델이라는 역사학자는 생산과 소비 사이를 파고드는 자본의 폭력적 개입을 강력히 비판하는데, 이때 거대자본이 행사하는 경제적 힘의 원천을 두 가지로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끼어들기',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끼어들어 양쪽의 관계를 끊는 동시에 양자의 사정을 파악해 양쪽 모두로부터 이익을 챙깁니다. 두 번째는 '자금력', 엄청난 현금과 신용을 동원해서 생산자를 제압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본은 결국 생산과 소비의 순환을 끊고 각개 격파함으로써 사람과 자연을 지배하고 경제적 부를 독점적으로 축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살림의 생산-소비 약정은 그 자체로 자본에 대한 '저항'이면서 동시에 '대안'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크게 협동하는 것은 서로에게 이익이 됩니다. 공동체가 유지되는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사회학에서는 감사와 배려의 마음을 바탕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needs)'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호혜성(reciprocity)'이라고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생명세계에서 생산과 소비는 서로를 살리는 순환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이후 생산자공동체와 소비자공동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생산-소비 약정 시스템'은 이상주의자들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살림의 생산자와 소비자는 바로 그 호혜적 관계의 이상을 20년 이상 실현해오고 있는 셈입니다. 유통자본의 '독점가격'이나 소비자의 수요와 생산자의 공급이 적대적으로 작동하는 '시장가격'이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가격' 시스템을 만들어온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한살림은 이미 직거래가 아니다" 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전북에서 생산된 1차 농산물이 경기도 물류센터를 거쳐 다시 전북으로 오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는 지적입니다. 각 지역 한살림에서는 '지역거래'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실제로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살림이 큰 틀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올곧게 지켜오고 있는 '생산-소비 약정'과 '책임생산-책임소비', '생산자-소비자 호혜가격 시스템'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감히 말하자면, 새로운 협동운동(경제공동체운동)의 세계적인 모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꾸로 생산-소비 약정과 호혜가격은 한살림이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근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과 소비의 호혜적 순환관계(호혜서클)는 매우 연약합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섬세하게 배려하지 않으면 곳곳에서 구멍이 뚫립니다. 기후붕괴로 생산여건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소비자들의 욕구도 다양해졌습니다. 서로 간에 더욱

깊은 배려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호혜서클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벼 생산 관련회의'를 '호혜가격' 시스템으로 안착시키고, 생산안정기금 등을 포괄적인 '호혜기금(혹은 협동기금)'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호혜가격과 '거대한 전환'

20여 년 전 한살림 출판부에서 펴낸 『생명의 경제 공생의 사회』라는 번역서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 나카무라 히사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동시에 비판하면서 '협약경제'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례로 <쓰고 버리는 시대를 생각하는 모임>을 소개합니다. 새로운 사회의 체제적 대안으로 말입니다. 비록 규모는 매우 작지만(지금도 소비자 회원이 3천 세대 정도입니다), 40여 년 간 일관되게 생산-소비 직거래운동을 해왔던 일본의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대안사회, 대안문명의 희망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¹⁵⁾

그런데 한살림은 벌써 20년 넘도록, 그리고 2천 생산자회원, 35만 소비자조합원 시대에도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만약 그 저자가 한살림의 사례를 접했다면 세계적인 모델로써 소개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벼 생산 관련회의'는 사반세기 한살림운동의 소중한 사회적 성과 중 하나입니다. '벼 생산 관련회의'는 한살림만의 독특한 사회경제적 대안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더욱 발전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으로 확산할 때입니다. 생산(자)과 소비(자)의 순환을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생명을 살리고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거대한 전환'의 획기적인 출발점입니다.

'초심'이라는 말이 꼭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귀하게 지켜왔고 하늘같이 높은 뜻을 지닌 모임이지만, 과연 지금도 그 첫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조금은 형식화된 '벼 생산 관련회의'가 다시 진솔한 대화의 장이 되고 신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배려의 마음이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모심과 살림의 마당으로, 또한 생명-협동시대의 사회적 대안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15) <쓰고 버리는 시대를 생각하는 모임>은 한살림과도 오랫동안 교류를 해왔으며, 올해 2012년에도 창립자인 쓰찌다 다카시 선생을 모시고 강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추신1: 소소한 생각 하나. '벼 생산 관련회의'라는 명칭에 대한 것입니다. 가격만이 아닌 생산-소비 전반을 협의하자는 숨은 뜻은 짐작이 되지만 얼른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담긴 엄청난 사회적 의미도 잘 전달되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이름'을 잘 불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생산자-소비자가 "모심의 마음으로 서로의 형편으로 헤아려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갖는 엄청난 사회적 의미를 잘 드러낼 새로운 이름이 필요합니다.

※추신2: "적정한 쌀값은 얼마일까?" 이 글의 주제가 아니라 언급하지 않았습시다만 자료를 찾고 글을 쓰는 동안 마음이 내내 편치 않았습시다. 한국사회 전체적으로나 한살림에서나 다른 물가에 비해 쌀값은 정말 제자리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1991년 한살림 쌀의 조합원 공급가는 80kg 기준으로 168,000원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316,000원으로 올랐습시다. 그 사이 시중 쌀값도 94,000여원에서 175,000여원으로 올랐으나 역시 두 배가 채 안 되었습시다.(참고로 쌀의 마진율은 시중이나 한살림이나 15% 정도입습시다.)

20년 사이 생활비나 소득의 상승률을 생각하면 정말 '겨우'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시다. 물론 한살림 조합원의 구매력도 생각해야 하고, 다른 생협 및 유기농매장과의 가격비교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시다. 쌀값을 높여도 소비가 줄어들면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생산비 보장, 소비량, 구매력, 유통비용/마진율,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습시다. 참 쉽지 않은 일입습시다. 그러나 '한살림 쌀값'과 국가적 '쌀값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시다. 생산자들의 생산비 보장 및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후붕괴-식량위기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그렇습시다. 마음과 지혜를 모아야겠습시다.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5호

발행일 2012년 12월 7일

발행인 박맹수

발행처 모심과살림연구소

(100-412) 서울시 중구 광희동2가 360번지 동훈빌딩 5층

<http://mosim.or.kr>